

아베노믹스... 건설투자를 저성장 탈피의 기제로 활용

— 향후 10년 간 100조~200조엔 규모의 재정 지출 통해 경제 회복 도모 —

허 윤 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khur@cerik.re.kr

IMF가 전망한 2016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0.5% 수준이며 올해는 0.6%다. 마이너스 성장은 벗어났지만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아베 내각이 4년여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것을 고려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더딘 회복세다. 이에 더해 안전 자산인 엔화로 자금이 몰리면서 엔화 강세도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2016년 1/4분기부터 4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상승세를 유지하였고 잠재 성장률을 웃돌았다. 또한, 물가 상승, 주가 상승, 기업의 경상이익 개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징후도 적지 않다. 물가가 오르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고, 미래 일본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렇듯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공공의 선도적 역할로 장기 침체 탈출구 마련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로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노동생산성 하락, 엔화 가치 상승 등으로 저성장 상황이 고착화되었다. 이를 탈출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은 10년 동안 ‘평균 명목 GDP 3% 성장, 실질 GDP 2% 성장’을 목표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신속한 재정정책’,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구성되며, 3개의 화살이라고도 불린다.

제1화살인 대담한 금융정책은 본원통화 공급 확대, 장기 국채 매입 확대 등 위험자산을 매입하여 디플레이션 및 엔화 강세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제2화살인 신속한 재정정책은 향후 10년에 걸쳐 100조~200조엔 규모의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제3화살인 새로운 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은 법인세 인하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 개혁 및 산업 성장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아베노믹스와 관련한 거시경제적 효과 논란은 존재하지만, 건설부문의 변화를 이끄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포함하여 아베노믹스의 추진으로 건설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의 건설투자는 1992년 84.0조엔을 정점으로 20여 년 만인 2010년에는 절반 수준인 41.9조엔까지 감소하였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변화의 양상을 보였고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부터는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부문별 상황을 확인하면 2013년에는 공공 건축이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주도하였고, 2014년에는 공공 토목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5년에는 민간·건축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 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5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민간 회복을 이끈 것이다. 이는 경기 침체기에 공공의 선도적 역할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

행된 2013년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민간의 개발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건설투자를 미래 성장의 핵심 가치로 인식

아베노믹스의 건설투자는 경기 활성화 수단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먼저, 건설투자가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버블 붕괴 직후의 실패 사례와 달리 미래 성장을 목표로 지역 집중, 예산 집행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버블 붕괴기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였으나, 재정 투입을 과당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산발적이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였다. 여기에 더해 1996년에는 단기적 회복세를 오판하여 경기 부양책을 중단하면서 부작용을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투자 형태가 효율성보다는 지역 균형 배분에 무게가 실리면서 수요가 없는 지역에 투자하는 비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반면, 아베노믹스의 건설투자는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국 단위로 보면 도쿄, 그리고 하부 시장으로 보면 소거점에 집중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아베노믹스는 인프라 정비 및 건설투자를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ICT 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축 규제 등 인프라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인프라 재고가 확보된 일본에서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칸센 신설과 같은 대규모 신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선투자를 사회적 안전 확보 및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

소·고령화, 시설물의 노후화,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대내외적 환경은 일본과 동일하다. 신규 건설과 재고 관리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베노믹스는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IT, 관광,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융합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수익성 확대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과거 일본에서도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였으나,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졌다. 당시 정책 추진 속도는 더뎠고 실효성도 낮았다. 이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인 ‘국가전략특구’, ‘개혁2020’에 참여하는 부처는 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내각관방,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지자체 등으로 전 부처를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미래 불안 여전하나 올해도 아베노믹스 추진

2017년 현재 아베노믹스는 중요한 기로에 섰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 기대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현상이 벌어졌다. 엔저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최근 일본 경제는 성장세를 맞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트럼프가 미·일 간 무역 불균형과 환율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게 되면 민간 소비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세 지속을 담보하기 어렵다.

건설투자 측면에서도 건설시장 활성화가 거시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면서 경제 성장을 기여도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도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만으로도 저성장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END**